

# 현안과 과제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 목 차

---

##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
3. 시사점 .....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오   준   범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 ■ 개요

사회신뢰도는 1인당 GDP, 지니계수 등 경제변수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지표이다. 사회신뢰도가 높으면 1인당 GDP도 높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니계수는 낮아져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World Value Survey(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는 29.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네덜란드(66.2%), 미국(38.2%) 등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신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신뢰도)**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에서 국민들은 주변 이웃(6.2점)을 가장 신뢰하였고, 정치권(2.8점)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부문의 신뢰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3.0명에 불과해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민주주의의 성숙(6.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능력에 따른 보상(2.8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사회가 대체로 공정해졌다고 변화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체감계층)** 우리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이 가장 높은 비중(47.3%)을 차지했지만, 중하층 이하로 느끼는 국민이 43.9%로 중상층 이상(8.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44.0%인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국민은 15.8%로 크게 낮았다.

**(사회통합 강화 전제조건)**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설문응답자 중 31.4%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살펴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기회균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28.5%),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26.2%)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살펴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느낄수록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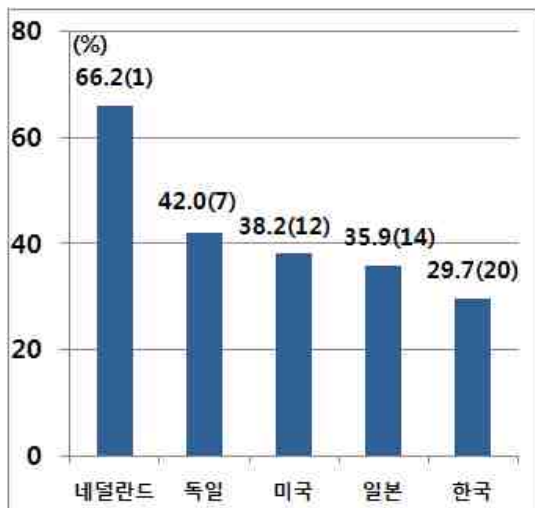
#### ■ 시사점

사회 통합 강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경제주체들에게 사회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잘못된 관행 등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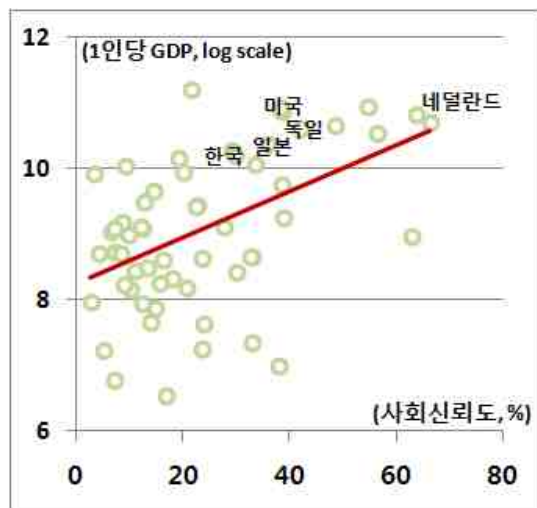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신뢰도는 1인당 GDP 등 경제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모습
  - (사회신뢰수준)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는 세계 20위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모습
    - 우리 국민은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수준이 29.7%로 주요 선진국인 네덜란드(66.2%), 미국(38.2%) 등에 비해 낮음
  - (사회신뢰와 경제변수) 사회신뢰도는 1인당 GDP, 지니계수 등 주요 경제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모습
    - 사회신뢰도와 1인당 GDP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신뢰도가 높으면 1인당 GDP도 높은 모습을 보여서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신뢰도와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사회신뢰도가 높으면 사회 불평등이 낮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신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sup>1)</sup>

< 주요국의 사회신뢰도 >



자료 : World Value Survey(2014).  
 주 1) 사회신뢰도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함.  
 2) 괄호 안은 60개 조사대상국 중 순위임.

< 사회신뢰도와 1인당 GDP >



자료 : World Value Survey, World Bank.  
 주 : 사회신뢰도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함.

1)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 2.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사회신뢰도)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주도층(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사적부문에서의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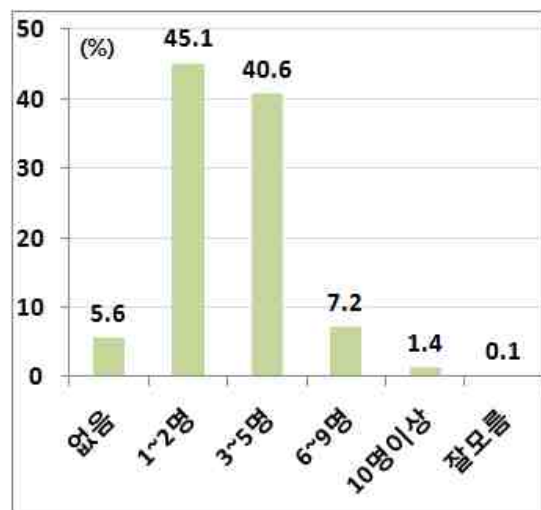
-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주변이웃이 가장 높은 점수를, 정치권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 우리 국민이 느끼는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주변 이웃이 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계가 4.9점으로 그 뒤를 이었음
  - 반면 정치권(2.8점), 정부(3.5점), 법조계(3.6점), 재벌대기업(3.5), 언론(4.0)은 처음 만난 사람(4.0점)과 비슷하거나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우리 국민의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음
- 한편 사적부문에서의 신뢰도 수준인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약 3.0명
  - 사적부문 신뢰도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3.0명 수준<sup>2)</sup>
  - 구체적인 분포로는 1~2명이란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3~5명(40.6%), 6~9명(7.2%), 없음(5.6%) 순이었음

<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 평가 >

항목	평균 점수 (점)
주변 이웃	6.2
처음 만난 사람	4.0
정치권	2.8
정부	3.5
법조계	3.6
재벌대기업	3.5
언론	4.0
학계	4.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10점 만점 기준.

<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평균값은 각 구간의 중간값, 10명 이상에 대한 응답은 10명으로 적용하여 계산함.

○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제외하고 중간수준을 하회한 반면, 국민들은 30년 전과 비교해서는 대체로 사회가 공정해졌다고 평가

- 우리나라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능력에 따른 보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 우리 국민들은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로 민주주의의 성숙에 가장 높은 6.2점의 점수를 부여함
- 반면 기회균등의 보장(4.0점), 소득분배 공정·형평성(3.6점), 공정한 경쟁 가능(3.5점), 능력에 따른 보상(2.8점)에 대해서는 중간수준 보다 낮게 평가함

- 한편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사회가 대체로 공정해졌다는 변화 없다는 의견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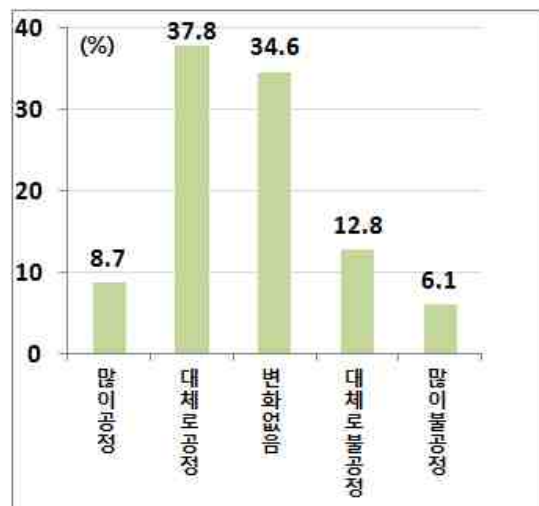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사회 불공정 정도가 대체로 공정해졌거나(37.8%), 변화 없다(34.6%)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분포로는 대체로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변화 없음(34.6%), 대체로 불공정해짐(12.8%), 많이 공정해짐(8.7%), 많이 불공정해짐(6.1%) 순이었음

<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 >

항목	평균 점수 (점)
민주주의의 성숙	6.2
기회균등의 보장	4.0
능력에 따른 보상	2.8
공정한 경쟁 가능	3.5
소득분배 공정·형평성	3.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10점이 만점임.

< 30년 전과 현재의 사회 불공정 정도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사회체제 변화 이유) 30년 전보다 공정해졌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은 교육 및 취업의 기회균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으며, 불공정해졌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강화가 문제라고 생각

- 우리 국민들은 사회체제가 공정해진 이유로 교육 및 취업의 기회균등, 법제도의 공정운영, 공정한 경쟁 강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사회체제가 공정해졌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교육 및 취업의 기회균등(26.8%), 법제도의 공정운영(23.8%), 공정한 경쟁 강화(23.1%)를 그 원인으로 평가함
- 한편 공정해진 이유와는 반대로 불공정해진 이유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강화, 약자 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 순으로 응답
  - 사회체제가 불공정해졌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약화(32.6%), 약자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24.2%), 법제도의 불공정운영(22.1%)를 그 원인으로 평가함
-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공정 혹은 불공정해졌다는 평가와 상관없이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사회가 공정해진 이유로 약자배려 및 재기지원 사회분위기(14.9%),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약화(11.5%)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사회가 불공정해졌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강화(32.6%)와 약자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24.2%)를 가장 문제라고 생각함

< 공정해진 이유 >

항목	응답비중(%)
법제도의 공정운영	23.8
교육취업 기회균등	26.8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약화	11.5
공정한 경쟁 강화	23.1
약자배려 및 재기지원 사회분위기	14.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불공정해진 이유 >

항목	응답비중(%)
법제도의 불공정운영	22.1
교육취업 기회불균등	13.2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강화	32.6
공정한 경쟁 약화	7.9
약자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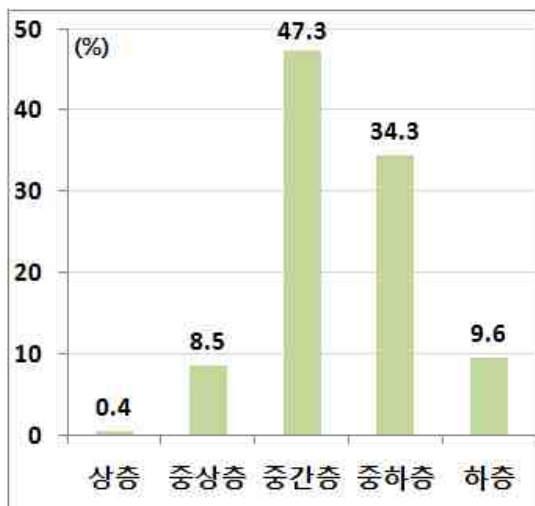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체감계층) 우리나라 체감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 이하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하층으로 느끼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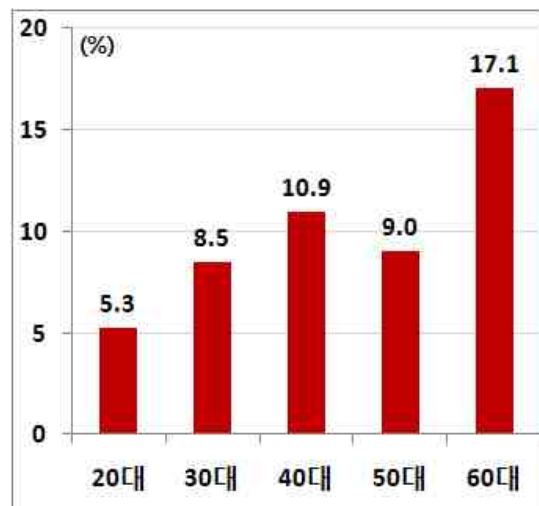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하층 이하가 중상층 이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
  - 우리 국민들 중 47.3%가 본인이 중간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계층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중하층으로 느끼는 국민이 34.3%, 하층이 9.6%로 중하층 이하가 43.9%로 중상층 이상(8.9%)보다 크게 높았음
  - 특히 설문조사 대상 중 상층으로 느끼는 국민은 0.4%에 불과해서 소득의 분포와는 관계없이 상층의 비중이 매우 작았음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하층'으로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계층은 직업 및 소득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임
  - 구체적인 분포로는 20대 중 5.3%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40대는 10.9%, 60대 이상은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체감 경제적 계층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연령별 '하층'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계층 이동가능성) 우리 국민은 계층 이동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 30대, 생산직, 충청/호남권, 대졸일 경우 계층이동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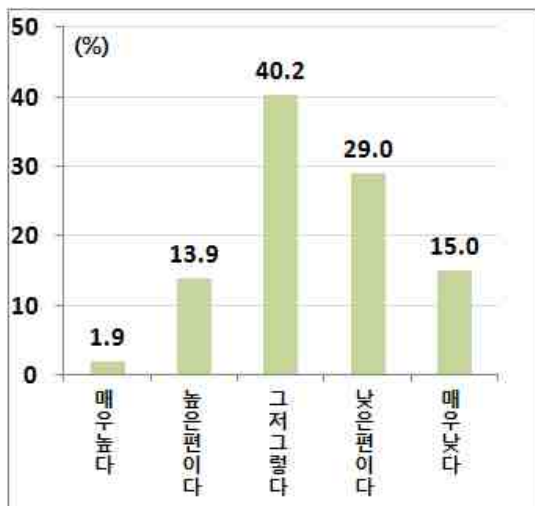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가능성은 중간 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 체감 계층과 유사하게 우리 국민들 중 40.2%가 계층의 이동가능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29.0%, 매우 낮은 편이다가 15.0%로 나타나는 등, 중간 수준 미만이 44.0%로 중간 수준 초과인 15.8%보다 크게 높았음
- 계층의 이동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 계층 이동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남성, 30대, 충청/호남권, 대졸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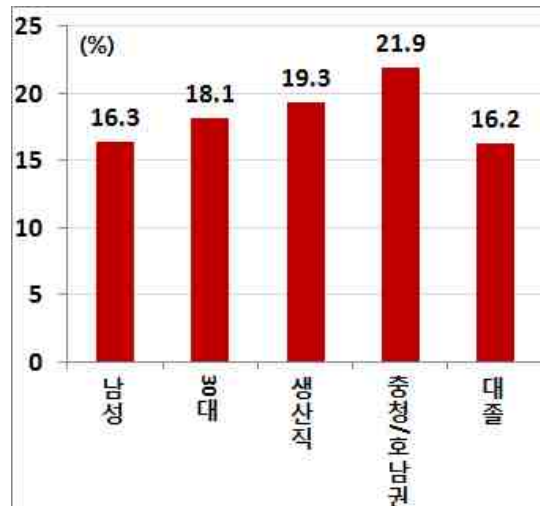
- 계층 이동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생산직, 지역별로는 충청/호남권, 학력별로는 대졸이 많았음

< 계층 이동가능성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계층 이동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 응답한 집단 특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사회통합 강화 전제조건) 우리 국민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회균등을 꼽았으며,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서로 다른 전제조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우리 국민들 중 31.4%가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시민의식 제고(23.6%), 법치주의 정립(19.9%), 경제적 약자 배려(15.4%),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9.7%)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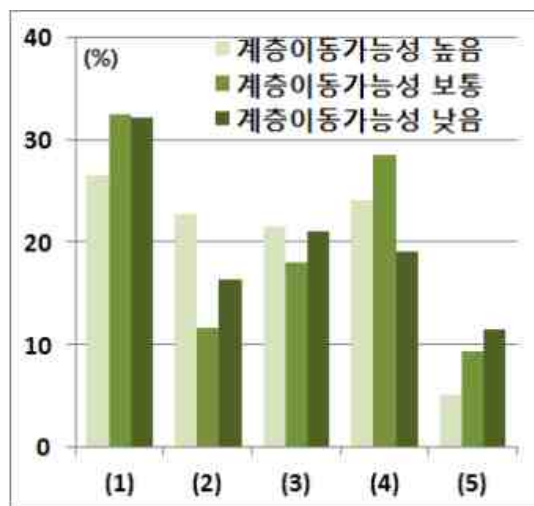
-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기회균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의 중요도를 비슷하게 생각함
-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기회균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에 대한 응답이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음

<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 > < 계층 이동가능성 별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 >

항목	응답비중(%)
(1) 기회균등	31.4
(2) 경제적 약자 배려	15.4
(3) 법치주의 정립	19.9
(4) 시민의식 제고	23.6
(5)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	9.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 안 숫자는 왼쪽 표의 항목을 의미함.

○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 우리 국민은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와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을 뽑고 있으며, 계층이동가능성 응답 별로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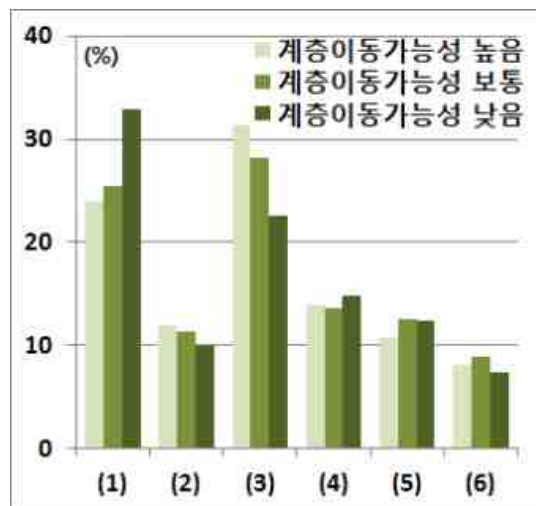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우리 국민들 중 28.5%가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 26.2%가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학연 등의 타파(14.2%), 공정·투명한 공직인사(1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10.8%),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정립(8.1%)순이었음
-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 별로 살펴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느낄수록 기득권층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요하게 생각
  -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중 31.4%가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 중 32.9%가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 >

항목	응답비중(%)
(1)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	28.5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0.8
(3)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	26.2
(4) 학연, 지연, 혈연 등의 타파	14.2
(5) 공정·투명한 공직 인사	12.2
(6)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정립	8.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계층 이동가능성 별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 안 숫자는 왼쪽 표의 항목을 의미함.

### 3. 시사점

○ 사회 통합 강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경제주체들에게 사회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사회신뢰도의 회복은 사회자본이라는 무형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사회의 갈등 유발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사회신뢰의 바탕이 되는 구성원 간의 투명성, 평등성 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규칙 등을 정비해야 함

둘째,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잘못된 관행 등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김영란법’을 비롯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의 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 부조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계층의식의 강화는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며<sup>3)</sup>,

3) 중산층이상의 계층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음.(현대경제연구원(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현안과과제 14-34호 참조)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는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최근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강화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면서 청년층의 도전이 사라지고, 이는 경제 활력을 점차 떨어뜨릴 우려가 높아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 운영 등 신뢰도·공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 **HRI**

오 준 범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별첨>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개요

- 설문기간 : 2016년 8.23~9.2
- 설문방식 : 유선 전화 설문
- 표본 수 : 1,009명
- 최대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09%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09명	100	소득 수준별	~300만원	42.7
성별	남성	49.8		300~499만원	35.4
	여성	50.2		500만원~	21.9
연령별	20대	20.9	직업별	사무직	38.0
	30대	24.1		공무원	5.7
	40대	23.9		생산직	14.6
	50대	18.6		자영업	13.8
	60대 이상	12.5		가사 / 주부	14.7
				학생 / 무직 / 기타	13.2
지역별	서울	21.5	학력별	고졸이하	28.3
	인천/경기	28.4		대졸	66.7
	충청/호남권	21.7			
	영남권	28.4		대학원졸	5.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